
정책참고자료

2019-1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강원 동해안, 자전거로 뽕뽕 달린다!

-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완료, 총연장 242KM 명품 라이딩코스 기대 -

2 국민권익위원회

“출산 전에 이사 왔다고 출산지원금 못 받는 건 억울해요”

- 거주요건 충족 못해 출산지원금 받지 못한 경우 감액 또는 사후 지급방안 마련 권고 -

3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카카오톡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쉽게 알아봐요

- 챗봇 SW업체·중기부 공동, 카카오톡 기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개발-

4 교육부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과학기술로 긴급대응 한다!

-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터널 사고, 지역별 안전도 진단 등 긴급대응연구 본격 착수 -

6 문화체육관광부

2019 열린 관광지 24개소 선정

- 남이섬, 전주한옥마을 등 포함, 전년도 12개소 선정 대비 대폭 확대 -

7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합니다.

- 농업계 대학생 500명을 선발,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학기당 등록금 전액 + 200만원 지원 -

8 환경부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육외 근로자'에서 '육외 작업자'로 확대 -

_____ 33

9 고용노동부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 명 취업

- 취업자 1.5 → 22.5만 명, 1년 고용유지율 38.6 → 52% 등 양적·질적 성장 -

_____ 40

10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젊음, 즐거움, 스포츠"가 가득한「Y.E.S! 꿈드림 축제」열린다

-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축제 24일~25일 개최 -

_____ 45

11 국토교통부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정책으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 난방 사용량 30년전 아파트 대비 43% 감소 -

_____ 51

12 해양수산부

플라스틱 없는 바다 만든다

-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2030년까지 50% 저감 목표 -

_____ 58

강원 동해안, 자전거로 뽕뽕 달린다

-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완료, 총연장 242KM 명품 라이딩코스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망상해변에서 옥계역까지 3.8km 구간의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이 6월 18일 완료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으로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삼척시 고포마을까지 총연장 242km의 강원지역 동해안 자전거길이 연결되어 자전거를 이용해 강원도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강원지역 동해안 자전거길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로 동호해변, 경포해변, 맹방해변 등 해변길은 물론 송지호, 낙산사, 휴휴암, 추암촛대바위, 해신당공원 등 지역 관광명소를 경유하는 명품 라이딩 코스이다.
- 더불어, 대포항, 주문진항 등에서 싱싱한 해산물과, 활기찬 어촌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 또한, 12곳의 국토종주인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인증수첩 스탬프 날인이나 '자전거 행복나눔 앱' 인증을 통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전거길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행정안전부 SNS,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 앱 등을 통해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마무리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자전거단체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동해안 자전거길이 연결됨에 따라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강원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자전거 동호인들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산 전에 이사 왔다고 출산지원금 못 받는 건 억울해요”

- 거주요건 충족 못해 출산지원금 받지 못한 경우 감액 또는 사후 지급방안 마련 권고 -

- 출산 시기에 이사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울산 ○○구에서 △△구로 이사하였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구에서는 거주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고, ○○구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불합리함 (2019. 3. 국민신문고)
- 아이가 태어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전입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데, ○○시에서는 전출하였으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에서는 6개월이 안되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니 불합리한 정책임 (2018. 1. 국민신문고)
- 대전 ○○구에서는 출생 1년 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지역구 내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 옳지 않은 처우라고 생각됨 (2018. 12. 국민신문고)
- ○○도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함. 앞으로 ○○도에 살 예정인데도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함 (2018. 3. 국민신문고)
- 출생일 전 6개월을 ○○구에 살아야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구에 살다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앞으로 ○○구에 계속 살게 될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됨 (2019. 3. 국민신문고)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쉽게 알아봐요

- 챗봇 SW업체 · 중기부 공동,
카카오톡 기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개발 -

중소기업 지원기관(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근무했던 배준철씨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고심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알게 되었다.

기업마당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중인 분야별(창업, 인력, R&D 등) 최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이후, 인력과 정보검색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지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챗봇 SW개발업체 ‘페르소나’를 창업한 배준철씨.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 기업마당에서 개방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기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개발하게 되었고, 지난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친구로 추가해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몇 번의 클릭으로 기관별, 분야별로 접수중인 최신 지원사업 정보 개요(사업명, 신청기간)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 사업내용은 기업마당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하여 확인하는 구조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이용방법 >

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설치 → ② 카카오톡 접속 후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검색 후 친구추가 → ③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실행 ④ 첫 화면에서 채팅하기 클릭 ⑤ 지역별/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공고 검색

배준철 대표는 "기업마당 지원사업 데이터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정보를 검색할 때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한다"면서, "관심사업 등록, 개인화 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올해 12월중에는 더욱 개선된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정식 서비스 하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정책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최신 지원사업 공고, 정책뉴스,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 중인 기업마당은 '19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1~5월) 85% 접속건수가 증가하였고, 하루 최대 13.7만명이 접속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의 필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개발은 정부혁신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발맞춰 지원사업 데이터를 ① 기업이 활용하여 ②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③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홍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페르소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데이터 제공 항목 확대, 검색기능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사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마당 및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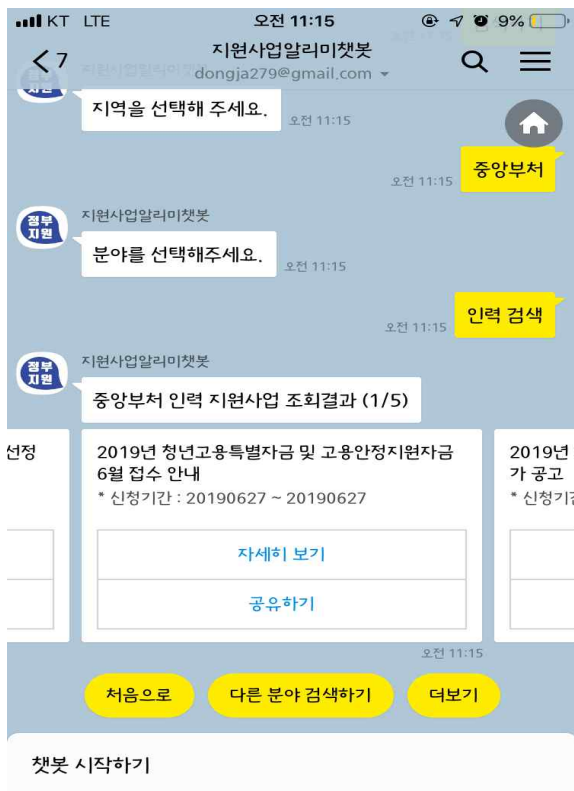
- 창업초기 기업 '페르소나'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중인 지원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기반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개발

- 카카오톡에서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친구 추가 하면 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개요 검색이 가능하고 사업 상세정보는 기업마당에 접속하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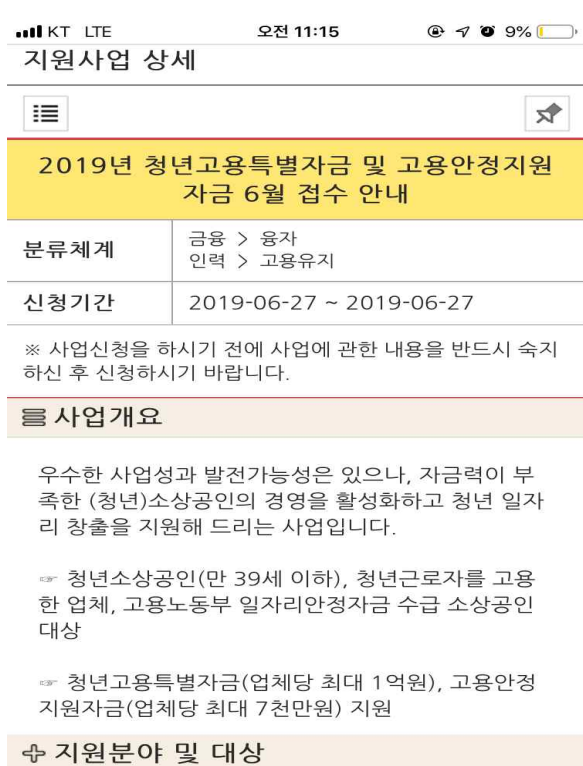
* 배준철 대표 "기업 지원기관 근무 시 지원정보의 중요성을 느껴 창업아이템 중의 하나로 기업마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 모바일 상세화면(예: 중기부 시행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사업 조회)



< 중앙부처/인력 선택 : 카톡 챗봇 >



- 지원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 사업 상세정보 확인 : 기업마당 >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 작년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자는 것에 뜻을 모았고, 올해도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5.16),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6.4)에 이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 *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예산기준 55.2조원으로 교육부 총지출 74.9조원 중 약 74%를 차지
 -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으며,

-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 * 우리 경제의 여건(글로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그간의 재정운용(총지출 증가율, 재정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교육투자 현황, 재정여건 등
 -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을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 *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이에 따른 초·중등 및 고등교육분야 정책 대응방향 등
 -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계획 1부.

□ **회의개요**

- (목적) '18년 개최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매년 교육청·교육부 등이 함께 지방교육재정 투자방향을 논의
- (주최/주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한국교육개발원
- (일시/장소) '19. 6. 12.(수) 15:30~17:3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 (참석) 부총리, 시·도교육감,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 **주요내용 및 진행순서(안)**

- ❖ (세션 1)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
- ❖ (세션 2)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안

《 세션 1 :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30~15:3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5:35~15:45	10'	□ 인사말씀	부총리, 교육감협의회장 등
15:45~16:00	15'	□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	기재부 2차관
16:00~16:30	30'	□ 발표주제 관련 참석자 의견제시 및 토론	KEDI 원장 사회
16:30~16:35	5'	□ 장내정리	사회자

※ ~ 인사말씀 : 언론 공개 / 이후 발표 및 토론은 언론 미공개

《 세션 2 :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안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35~16:50	15'	□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	교육부 기초실장
16:50~17:20	30'	□ 발표주제 관련 참석자 의견제시 및 토론	KEDI 원장 사회
17:20~17:30	10'	□ 마무리 말씀	부총리, 교육감협의회장 등
17:30	-	□ 정리 및 폐회	사회자

문미옥 차관, 강원 지역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 미래농업 및 지역기업 혁신지원 현장 방문
[KIST 강릉分院,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6월 13일 (목), 강원권 소재 정부 출연(연) 지역조직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문미옥 차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비철금속 소재 부품 제조기술 실험현장과 홍보관을 방문하여 현장 연구자를 격려하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지역 선도 연구 기관으로서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4차 산업 등 미래에 도전하는 전략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分院 천연물연구소 스마트 유팜(Smart U-FARM), 실증팜을 방문하여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우리나라 천연물 소재 및 스마트팜 기술 연구개발(R&D)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스마트팜 기술은 식량 안보 위협에 대비한 미래농업기술로서, 앞으로 기능성 작물의 대량 생산과 제품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젊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19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현장 의견을 청취한 문미옥 차관은 “출연(연) 분원은 지역의 주체들과 연합하고 지역 혁신 성장의 핵심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우수한 연구 성과가 지역 특화 산업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젊은 연구자들도 일하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같이 고민하자.”라고 말했다.
- 문미옥 차관은 “정부도 규정 통합, 시스템화, 행정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지난 5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각 기관별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1 현장방문 개요

- (목적) 연구현장 방문 및 젊은 과학자 간담회
- (일시/장소) '19.06.13(목) / 생기원 강원지역본부, KIST 강릉분원

2 주요 일정

- 생기원 강원지역본부 → KIST 강릉분원

시 간	내 용	장 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10:10~10:30	환담	생기원(강릉) 본부장실
10:30~11:00	업무보고(30분) ‣ 기관 홍보영상 시청(5분) ‣ 업무보고(20분)	생기원(강릉) 회의실
11:00~11:30	연구자 간담회(30분) ‣ 젊은 과학자 등 8명	생기원(강릉) 회의실
11:30~12:00	연구현장 방문(30분) ‣ 비철금속 소재 부품 제조기술 실험현장 ‣ 본부 홍보관 방문	현관앞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13:10~13:30	환담	KIST(강릉) 분원장실
13:30~14:00	업무보고(30분) ‣ 개원 15주년 기념영상 시청(5분) ‣ 업무보고(20분)	KIST(강릉) 컨퍼런스홀
14:00~14:30	연구자 간담회(30분) ‣ 젊은 과학자 등 8명	KIST(강릉) 컨퍼런스홀
14:30~15:00	연구현장 방문(30분) ‣ Smart U-FARM ‣ 실증팜	KIST(강릉) Smart U-FARM 실증팜

2019 열린 관광지 24개소 선정

- 남이섬, 전주한옥마을 등 포함, 전년도 12개소 선정 대비 대폭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6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4개소를 선정했다.

‘열린 관광지’는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13곳이 이번 사업에 지원했으며, 그중에 9곳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심사에 참여했다. 최종적으로 관광지 2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

<2019 열린 관광지>

지역	관광지			
강원 (춘천)	남이섬	물길로	소양강 스카이워크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전북 (전주)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주향교	경기전
전북 (남원)	남원 관광지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관
전북 (장수)	방화동 가족휴가촌· 자연휴양림	장수누리파크	와룡 자연휴양림	뜬봉샘 생태관광지
경남 (김해)	김해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봉하마을	김해한옥체험관
제주 (서귀포)	서귀포 치유의숲	올레7코스	서복전시관	성산일출봉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 한 후, 선정된 관광지에 대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부터 권역 단위로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각 열린 관광지 자체의 매력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열린 관광지 간 연계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이 지원합니다.

- 농업계 대학생 500명을 선발,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학기당 등록금 전액 + 200만원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2학기부터 기존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 동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해 ‘19.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고, ‘19년도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22.5억원)할 예정이다.

○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졸업 후 농업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학기당 의무교육 30시간 필수 이수 : O.T(5시간), 지정교육(20시간), 자율교육(5시간)

-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에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의 첫 시행에 앞서 농과대학 및 장학금·농식품 분야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시행계획에 반영하였고,

- 농업계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5.31~6.12, 경북대 등 12개 대학)하여 신설·개편되는 장학사업 안내와 함께 장학사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이 “청년농업 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은 ‘19.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19.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하여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 단, 고학년 학생(3~4학년) 중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 단, 신청한 2개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모두 선발될 경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

- 이와 함께 농업인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소득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 접수 이후 7월 중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1부. 끝.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농촌지역 저소득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교육비 지출 부담 완화 및 영농 후계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기반 형성이 필요
- 농업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에 따라 미래 농업·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인력 확보 및 농식품 산업 분야 우수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

□ 추진 경과

-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농업인 자녀와 농업 후계인력에게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던 장학사업이 국고 예산 사업으로 편입('15~)
- 기재부 핵심사업평가 결과, 중장기 제도 개선으로 의무장학금 도입 권고('18)
- '19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19.6.)

□ 주요 내용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 대상)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 * 시행년도 기준(2019.1.1.) 만 40세 미만인 자로, 1979.1.1.일자 이후 출생자
-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최대 4학기)
- (의무 사항) ① 보증보험 가입* ② 학기 중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③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 간 농촌 및 농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유지
 - * 장학생 자격상실,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학기별 가입
- ('19.2학기 예산) 2,250백만원 (지원 규모 : 500명)

[농식품인재장학금(구. 농림축산분야후계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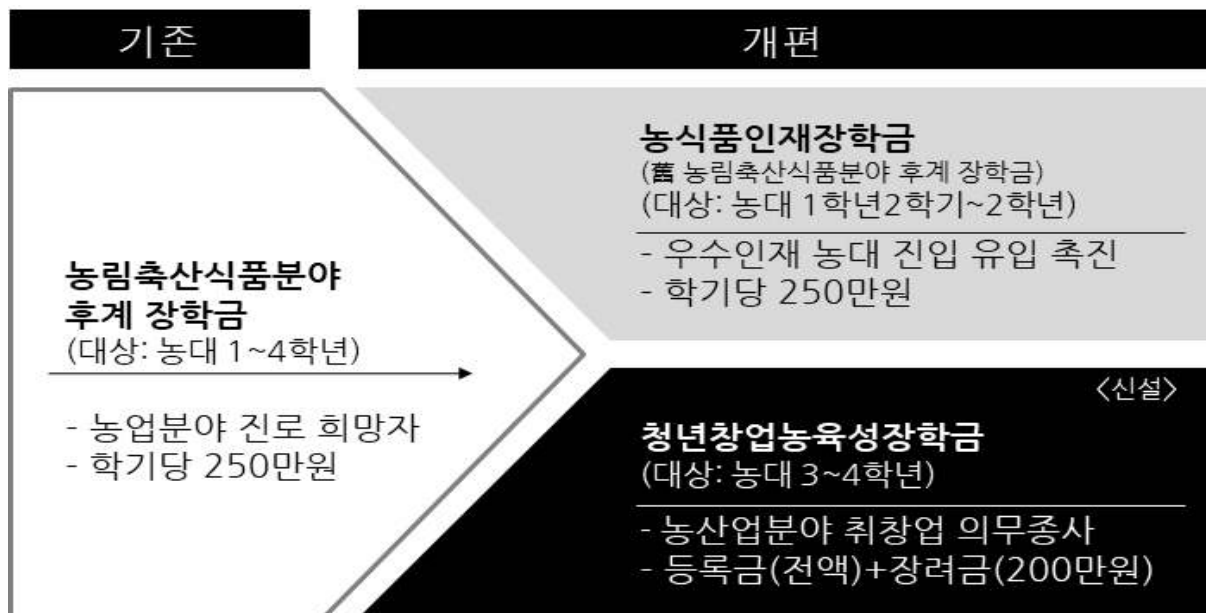
- (지원 대상)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 2학년 학생(전문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지원 내용) 학기당 250만원 (최대 3학기)
- ('19.2학기 예산) 2,125백만원 (지원 규모 : 850명)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 대상) 농업인 자녀 대학 재학생 (학과·전공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기초~8분위
- (지원 내용) 학기당 50~200만원 (소득·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19.2학기 예산) 2,350백만원 (지원 규모 : 1,550명)

< '19.2학기 장학금 제도 개편(요약) >

- ◆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재설계
 - 3~4학년 대상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 도입
 -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은 1학년2학기~2학년 대상으로 지원



- * 농식품인재장학금은 '19년 2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
- *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생은 해당 장학금 계속 신청 가능

8

환경부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595곳 특별안전점검

-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대상,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7개 권역별로
유역(지방)환경청, 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7~8월)에 화학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595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부가 2014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49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5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제외한 발생건수 월평균 35.2건에 비해 약 1.55배 높은 셈이다.

※ 전국 화학사고 발생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me.go.kr)에서 확인 가능

○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선제적 예방적 서비스(적극적인 사고예방) 구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 특별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화학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595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연발화 등의 이유로 여름철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금 사업장이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독성 화학물질(염산, 질산 등) 취급 업체, 과거에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업체 등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를 비롯해, △취급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장구 착용·비치, △자체점검 실시여부 등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 및 사업장의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17.11.22. ~ '18.5.21.(6개월))

< 권역별 특별안전점검 대상 및 개소 >

구 분	점검대상(지역)	개소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지역 도금사업장	323	여름철 사고발생 우려 (고온의 작업환경)
낙동강유역환경청	폐기물재활용업체	62	폐기물 자연발화 우려
금강유역환경청	대산산업단지	32	염산, 질산, 독성가스 등 여름철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심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산업단지	37	
원주지방환경청	중점관리사업장 등	35	여름철 사고발생 우려 (공공·주거시설 인접 위치)
대구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79	폐기물 자연발화 우려
전북지방환경청	고위험 사업장 등	27	과거 여름철 사고이력
합계	-	595	-

-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이번 특별안전 점검이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추이.
2. 전문용어 설명.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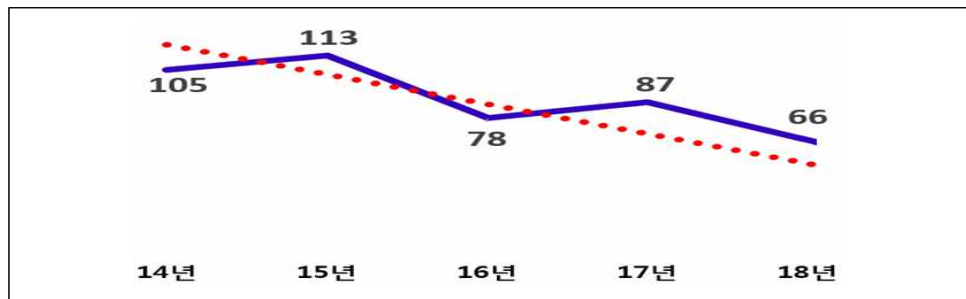
붙임1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추이

-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me.go.kr)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연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취급업체의 대형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4년~'18년까지 발생한 총 화학사고 건수는 449건이며, 연간 발생건수는 14년부터 매년 105건, 113건, 78건, 87건, 6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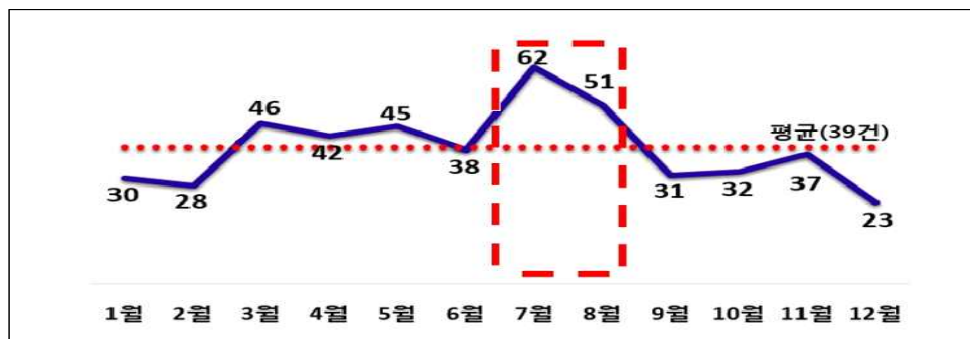


- '19년(~5월) 기준 화학사고 16건(유·누출 14건, 기타사고 2건), 일반사고 37건 (유·누출이 없는 단순 화재·폭발 등) 등 총 53건 발생

- 월별 화학사고 건수('14~'19.5월) 분석 결과 하절기 접어들면서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사고 발생건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임

- 7~8월의 월평균 화학사고 발생건수(56.5건)는 이 기간을 제외한 연간 월평균 화학사고 발생건수(35.2건) 대비 약 1.55배 상당

< 월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



붙임2

전문용어 설명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 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독물질** : 독성 등이 있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현재 914종이 지정되어 있음
 - * 예) 벤젠, 페놀, 황산, 염산 등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 예) 폐산, 폐알칼리, 폐농약,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등
- **고위험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중 취급시설의 위험도(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도로 구분된 사업장
 - *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서
 -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등의 관리계획이 포함된 문서
- ※ **사고대비물질** :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붙임1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시행령 주요내용

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절차

- (지정계획 수립·공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지정요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법인·단체 中
 - 사업목표 및 계획이 지정목적에 적합할 것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재정 확보능력이 있을 것
 - 미세먼지 분야의 조사·연구 또는 교육 실적이 있을 것
- (심사단 구성)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 적합여부를 심사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 >



②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취소 요건

- 법에서 정한 취소요건 이외에 추가 요건을 정함
 -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

③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
 - (현행)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개정)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변경하여 농어업인 등도 포함

2. 시행규칙 주요내용

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및 절차 등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구체화
 -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 미세먼지 분야의 조사·연구·교육 또는 기술개발 실적
 -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 (지정절차) 지정서 발급, 현판 제공 및 사업관리
 -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보고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능 강화

-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조문정리

③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범위 확대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까지 확대
 - (현행)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신청이 가능
 - (개정)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하여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

붙임2

전문용어

□ 취약계층

-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①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②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함(시행규칙 제14조)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 환경부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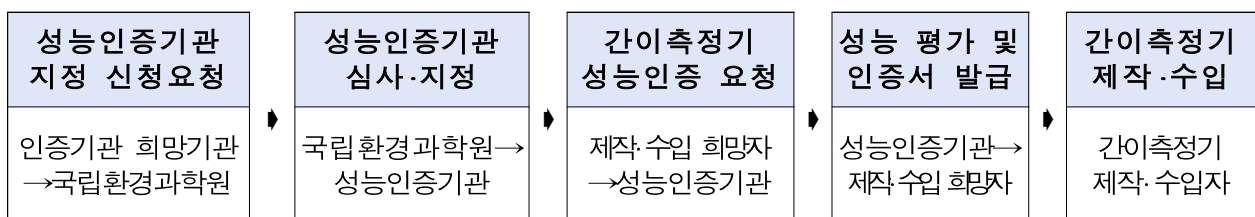
붙임3

질의응답

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란 무엇이며, 왜 인증기관을 추가하는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 ~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기기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가 대상임
- 현행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신청이 가능하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원활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하려는 것임

< 성능인증 절차 >



9

고용노동부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 명 취업

- 취업자 1.5 → 225만 명, 1년 고용유지율 38.6 → 52% 등 양적·질적 성장 -

<취업성공패키지의 ‘공(功)’>

◆ 취업성공패키지 개요(2019년 기준) <상세: 참고1>

- (개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 직업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의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미취업 청·장년층 등
- (목표 지원 인원 및 예산) 22.7만 명, 3,710억 원

□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 명을, 취업자 수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

○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이 사업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세부통계: 참고2>

1) 양적 성장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과 대상을 꾸준히 늘려 취업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폭넓게 지원했고 취업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 지원 인원: (2009년) 0.9만 명 → (2018년) 30.8만 명

- 지원 대상 확대: (2009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2011년) 만 34세 이하 청년 → (2012년) 만 35~64세 중장년 → (2017년) 만 65~69세 중장년

- 취업자 수: (2010년) 1.5만 명 → (2017년) 22.5만 명(2018, 2019년 통계 미정)

2) 질적 성장을 보면 그동안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해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6개월, 12개월)이 꾸준히 높아졌다.

- 취업률(%): (2010년) 59.2 → (2018년) 64.9* (5.7%p ↑)

* 4년제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 62.6%(2017년 기준, 교육부)와 비교할 때 2.3%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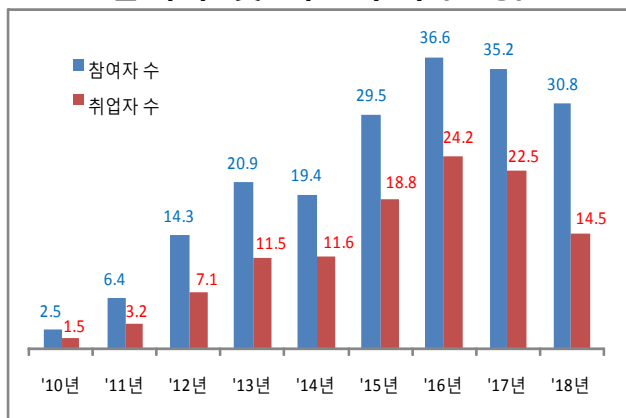
- 6개월 고용유지율(%): (2010년) 60.1 → (2018년) 62.8 (2.7%p ↑)

- 12개월 고용유지율(%): (2010년) 38.6 → (2018년) 52 (13.4%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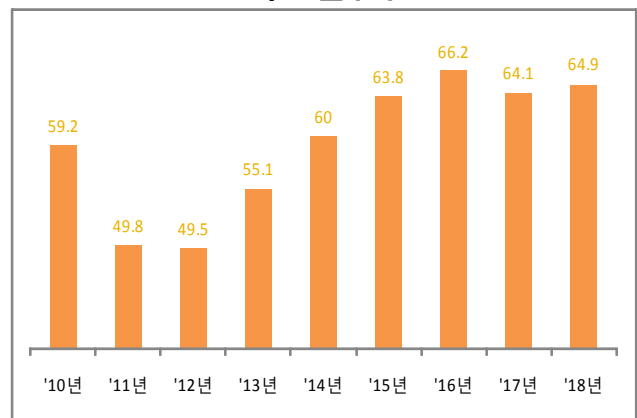
* ▲ 성과관리 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된 2010년 이후 취업 성과 분석

▲ 2018년 통계는 서비스 진행인원(2019년 3월 기준 7만 명)의 취업 성과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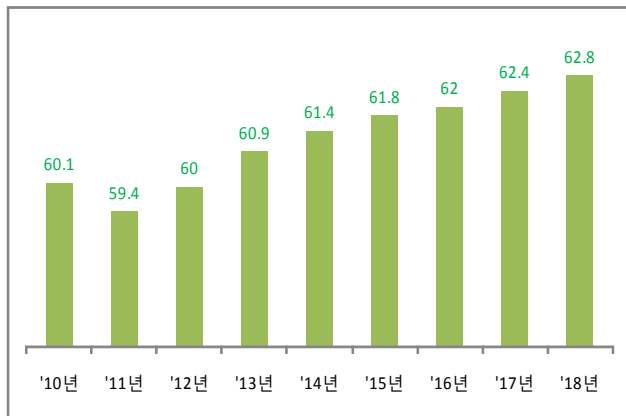
참여자 및 취업자 수(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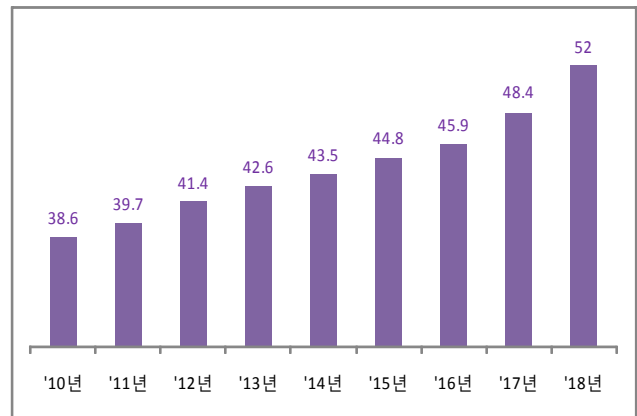
취업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3)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취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상세 우수사례: 참고3>

- 이혼과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한 사례,

-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니트족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 50대의 나이에 13년간의 경력 단절을 딛고 사회복지 기관의 재무 담당자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된 사례 등에서
-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과(過)'>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첫째,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하여 구직자 및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취업 취약 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일반적 규정만 명시

○ 둘째, 현장에서는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고 있다.

-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등 상담의 품질을 높이며,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 셋째,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

-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

-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 (2019년 2월 고용부 장관 현장 간담회, 취업성공패키지 옴부즈만 등)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고 하니 올해 예산이 바닥나서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취업하려면 도움이 필요한데 내년까지 기다리라니..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제가 원하는 게임 산업 등의 직종의 직업 정보는 상담사가 잘 모르고, 직업훈련 외에는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 “직업훈련 기간에는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나와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구직 기간에는 수당 지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아무 일자리라도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향후 발전방향: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정부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에 노사도 공감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기 도입에 합의했으며, 올해는 추가 논의를 하여 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로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니다.
-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1 밀착 상담을 하여 취업 장애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 참여자는 이러한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 임서정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하면서,

- 그러나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젊음, 즐거움, 스포츠’가 가득한 ‘Y.E.S! 꿈드림 축제’ 열린다

-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축제 24일~25일 개최 -

-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2019년 「Y.E.S! 꿈드림 축제」가 24일 (금)부터 25일(토)까지 이틀 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첫 전국 규모의 체육문화 축제이다.
- 이번 축제는 다양한 경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과 문화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한 달 동안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36.9%로 나타남
- “Youth(젊음), Enjoy(즐거움), Sports(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대표하는 꿈드림 청소년단*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기획, 축제운영,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기주도 활동으로 진행된다.

< 꿈드림 청소년단 >

- 구 성 : 전국꿈드림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각센터 당 1명 이상)
- 주요역할 :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수렴 및 욕구파악과 인식개선 홍보 등
- 운영방법 : 시·도별 회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사항 도출

○ 첫 번째 주제 ‘Youth(젊음)’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스포츠 자격취득 과정 등 관심분야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공과정을 강연하는 ‘나의 도전기’, 청소년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모의창업 공간* ,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거리공연’ 등이 진행된다.

* 모의창업 공간(뽀뽀비즈) : 창업에 관심 있거나 실물경제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재 선정에서 판매·결산까지 체험하는 프로그램

○ 두 번째 주제 ‘Enjoy(즐거움)’는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구역별 부대행사로 운영된다.

- 장기자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꿈과 끼를 뽐내고, 외부기관과 연계한 정보체험 공간*을 운영하여 정보제공 및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된다.

* 정보체험 공간 : 성격 및 심리검사, 청소년 모의재판 체험, 응급구조 체험, 드론(무인기) 비행체험, 스포츠스태킹(컵 쌓기 게임), 체육상자 등

○ 마지막 주제 ‘Sports(스포츠)’는 꿈드림 센터 실무자와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회와 종목별 팀 대항전*을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종목별 팀 대항전 : 미니축구, 농구, 발야구, 배드민턴, 100m 달리기 등

□ 이번 축제에는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관 기관이 동참한다.

- 대한안전협회에서는 응급구조 체험활동,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에서는 드론(무인기) 체험공간, 한국교육개발원은 포토존(사진촬영공간), 교육부에서는 진로체험버스(청소년 모의재판 등)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폐막식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대회 및 진로탐색 강연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이마트와 롯데칠성음료에서는 청소년들의 간식과 음료를 후원한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은 “이번 축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또래들과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라며,

-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살리고 더 많은 가능성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2019 Y.E.S! 꿈드림축제 홍보포스터
2. 2019 Y.E.S! 꿈드림축제 행사 개요

붙임1

2019 「Y.E.S! 꿈드림축제」 홍보포스터



붙임2

2019 「Y.E.S! 꿈드림축제」 행사 개요

□ 추진 배경

- 다양한 활동 경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소속감·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문화 활동 기회 제공

□ 행사 개요

- 행사명 : 「Y.E.S! 꿈드림 축제!」
 - * YES의 의미? Youth, Enjoy, Sports 각 단어의 테마를 가진 축제로 구성
- 일 시 : 2019년 5월 24일(금) ~ 25일(토) / 1박 2일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시 목천읍 소재)
- 대 상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및 실무자 800여명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 테마별 운영프로그램(안)

테 마	프로그램	방 법
Youth	나도 선생님	· 스포츠 자격 취득 청소년의 성공담, 자격취득 노하우 강의 및 실습지도 등
	플리마켓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모의창업 부스 운영
	버스킹	·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형태의 공연
Enjoy	장기자랑	· 센터 내 댄스, 가요 등의 동아리 및 개인 청소년 사전 신청 후 당일 대회 실시
	정보 및 체험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민·관 기관의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체험의 장 마련
	IT Zone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e-sports 게임 대회, 게임분야 진로 정보 제공 등)
Sports	팀별 대항	· 미니축구, 농구, 배드민턴, 발야구 등의 토너먼트 경기
	명랑운동회	· 실무자와 함께하는 게임 및 이벤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 플라잉디스크, 국궁, 암벽타기 등 진행

□ 전체 프로그램

○ 1일차(5.24)

구 분	5월 24일(금)							
	실외					실내		
	대운동장	풋살장	농구장	소운동장	중앙광장	국제회의장	중강당	종합체육관
13:00~13:30	개막식							
13:30~16:00	명랑운동회						IT Zone 운영	
16:00~17:00	100m 달리기	미니 축구	농구	발야구	부스 운영	바운드 볼		도전 체력왕!
17:00~18:00	플라잉 디스크							
18:00~19:00	저녁시간					저녁시간		
19:00~22:00						장기 자랑		

○ 2일차(5.25)

구 분	5월 25일(토)						
	실외						실내
	대운동장	국궁장	챌린지 코스	상생 협력장	풋살장	소운동장	종합 체육관
07:00~09:00	기상 및 조식						
09:00~11:00		국궁	암벽대회	오리엔 티어링	미니축구 결승전	발야구 결승전	배드민턴 및 농구 결승전
11:00~11:30	폐막식						
11:30~13:00	점심시간						
13:00~	귀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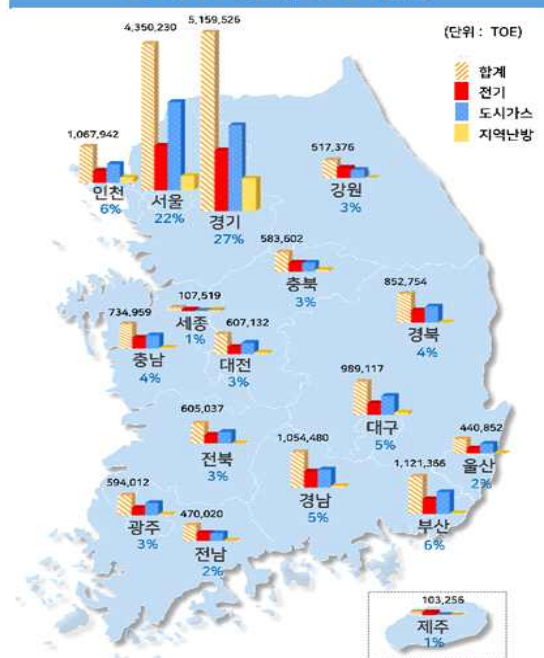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정책으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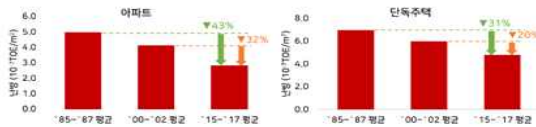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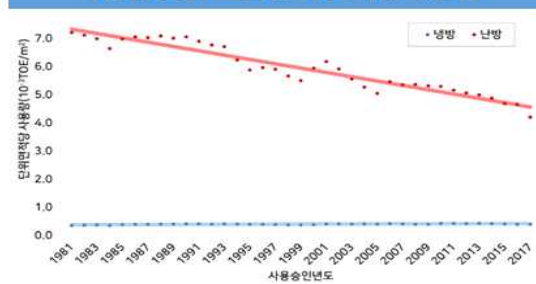
- 난방 사용량 30년전 아파트 대비 43% 감소 -

2018년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현황

전국 시도별 에너지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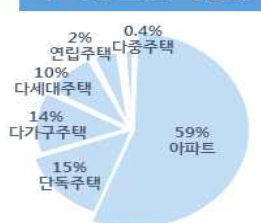
사용승인연도별 단위면적당사용량



준공시기별 난방사용량(면적당)



주거용도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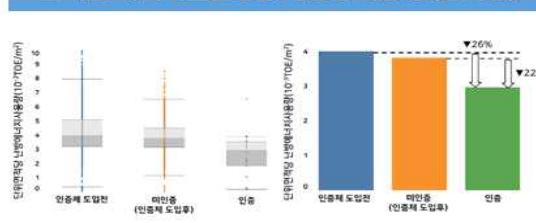


에너지원별 사용량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포함됨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과 난방사용량(면적당)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전국 모든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5월 30일 발표했다.

* '18.8.13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국가통계 승인(제408003호, 한국감정원)

-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주거용도별(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건물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별로 집계하며 금년부터 매년 5월말에 발표한다.
- 동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분석 자료는 지자체별 도시재생사업, 주택정비사업의 효과분석,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효과적인 감축수단 발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 2018년 주거용 건물 전체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19,359천TOE이며, 시도별, 세부용도별, 에너지원별 사용량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시도별) 경기(27%), 서울(22%)이 전국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 연면적(43%)에 비해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도시화율이 높은 수도권이 전체 연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석탄, 석유 등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외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지방의 경우 사용량 비중이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으나 향후 매년 발표할 통계 변화 추이 분석과 전망을 통해 효과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구분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사용량 비중	27%	22%	6%	6%	5%	5%	4%	4%	3%
연면적 비중	25%	18%	7%	5%	7%	5%	5%	4%	3%
구분	전북	광주	충북	강원	전남	울산	세종	제주	전체
사용량 비중	3%	3%	3%	3%	2%	2%	1%	1%	100%
연면적 비중	4%	3%	3%	3%	3%	2%	1%	1%	100%

<전국 대비 지역별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과 연면적의 비중 >

- ② (세부용도별) 아파트(59%)가 가장 높고, 단독주택(15%), 다가구주택(14%), 다세대주택(10%), 연립주택(2%), 다중주택(0.4%)순으로 집계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연면적(64%)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타 세대와 인접하는 아파트 구조의 특성과 지역난방 비중이 높은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
사용량 비중	59%	15%	14%	10%	2%	0.4%
연면적 비중	64%	16%	11%	7%	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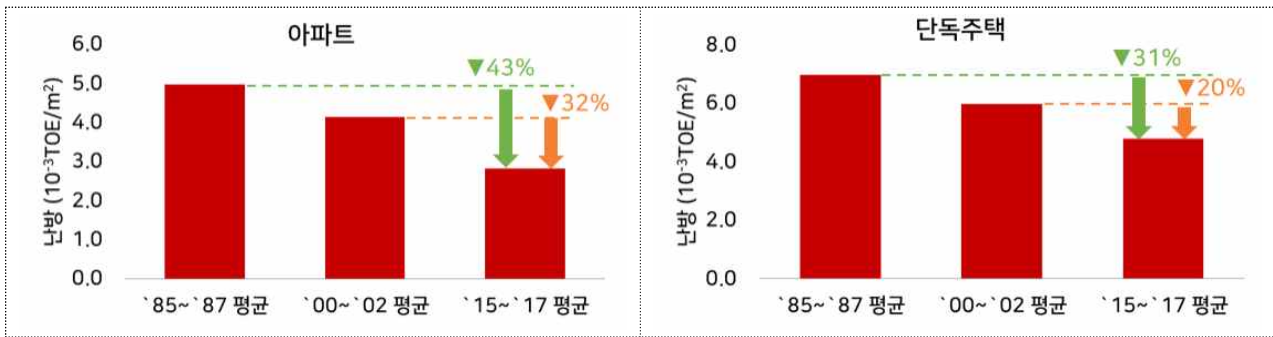
<전체 대비 주거 용도별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과 연면적의 비중 >

- ③ (에너지원별) 도시가스 사용량(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는 37%, 지역난방은 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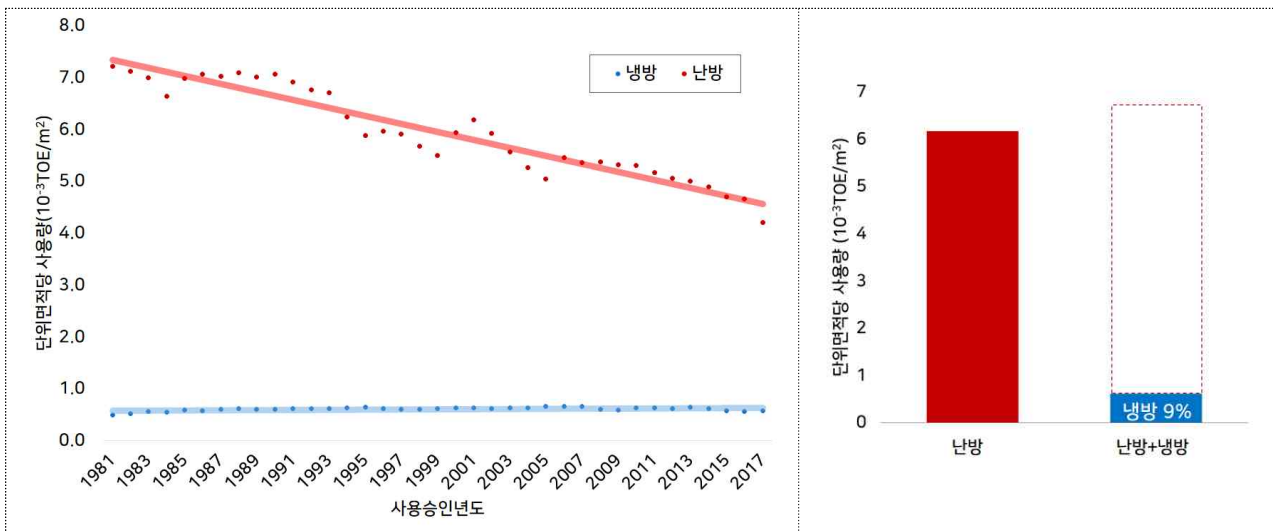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사용량: 도시가스(10,372천TOE), 전기(7,128천TOE), 지역난방(1,859천TOE)

□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에너지 사용량 변경 추이는 다음과 같다. (중부지방 기준)

- ① (난방사용량) 30년전 사용승인(‘85~‘87년)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15~‘17년) 사용승인된 동일 유형 주택과의 단위면적당 난방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4.97 \rightarrow 2.82 \text{ } 10^{-3} \text{TOE/m}^2$), 단독주택은 31%($6.98 \rightarrow 4.78 \text{ } 10^{-3} \text{TOE/m}^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난방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② 냉방사용량($0.6 \times 10^{-3} \text{TOE/m}^2$)은 냉·난방사용량($6.8 \times 10^{-3} \text{TOE/m}^2$)의 약 9%에 불과하고 시계열로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기후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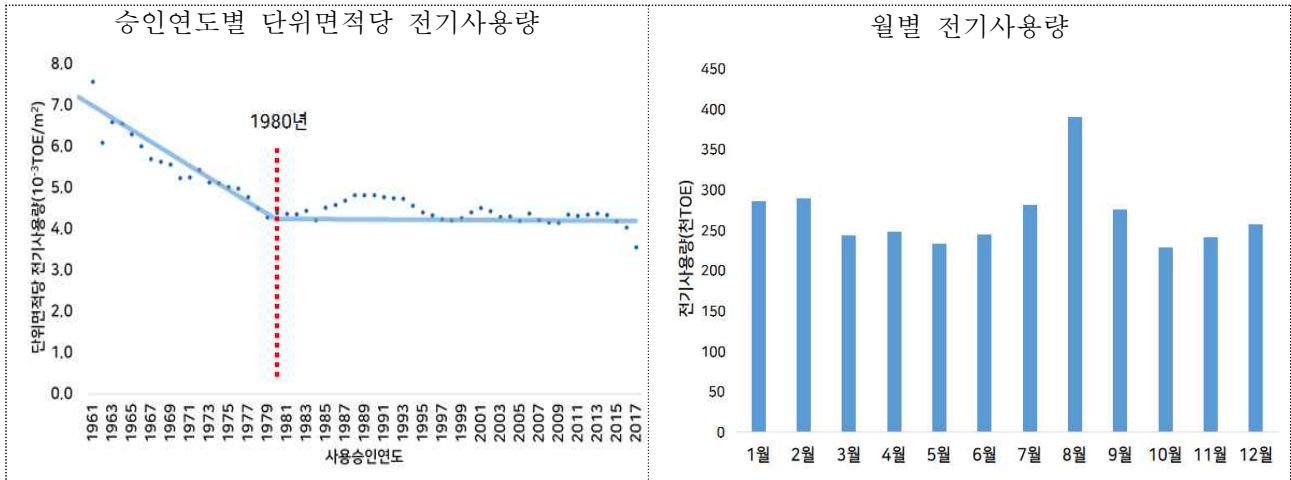


<아파트 및 단독주택 준공시기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 비교>



<사용승인연도별 주거용 건물 단위면적당 냉난방에너지사용량 및 냉난방 비율>

- ③ (전기사용량) 주거용 건물의 단위면적당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980년 사용승인연도 이전 주거용 건물에 비해 그 이후 지어진 주거용 건물의 전기사용량이 줄어들고, 완만하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 한편, 주거용 건물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절기에 전기난방기기 등의 증가로 중간기에 비해 약 14%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용 건물 사용승인연도별 단위면적당 전기사용량 및 월별 전기사용량 >

□ 건축물 단열기준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물 정책·제도 강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변경 추이는 다음과 같다.

- ① (단열기준) 단열기준*이 강화될수록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은 모든 주택유형에서 지속적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1979년 9월 단열기준을 최초로 시행한 이래 '01년, '08년, '13년, '16년, '18년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왔으며, 그 결과 에너지 사용량의 유의미한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시장의 수용성과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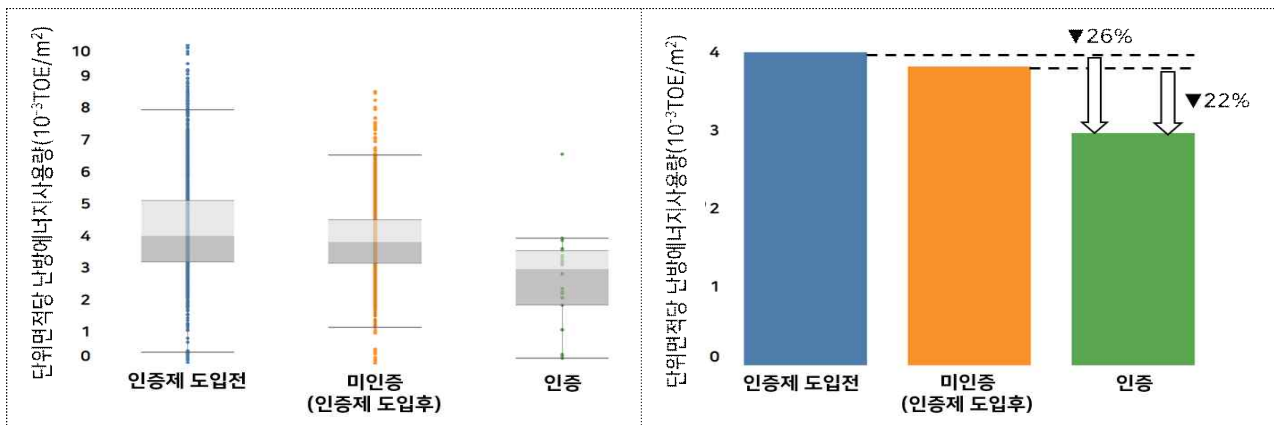
<주거 유형별 준공시기에 따른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

* A그룹('79.09이전), B그룹('79.09~'00.12), C그룹('01.01~'08.06), D그룹('08.07~'13.08), E그룹('13.09이후)으로 구분

** 주거 유형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의 단열기준 A그룹과 E그룹간 비교 :
단독(8.6→4.9 10^{-3} TOE/m²), 다중(7.8→5.7 10^{-3} TOE/m²), 다가구(7.9→4.4 10^{-3} TOE/m²),
아파트(5.2→3.0 10^{-3} TOE/m²), 연립(7.7→3.5 10^{-3} TOE/m²), 다세대(8.2→5.0 10^{-3} TOE/m²)

②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도입('01년)* 이후 인증받은 아파트는 미인증 아파트에 비해 난방사용량이 22%(3.83→2.97 10^{-3} TOE/m²) 낮고, 인증제 도입 이전 아파트 수준에 비해 26%(4.01→2.97 10^{-3} TOE/m²) 낮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건축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적용 요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1년 공동주택부터 시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아파트와 미인증아파트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

□ 건축물 용도와 지역별 세분화 통계 분석이 불가능했던 종전의 에너지통계와 차별화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공표에 이어
「비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단계적 마련함으로써 모든 건
물부문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량 추이 및 에너지사용량 효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을 지속적 개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없는 바다 만든다

-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2030년까지 50% 저감 목표 -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우려가 큰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1 μ m~5mm 미만)된 합성 고분자화합물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방안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 ◆ **해양발생**: 폐어구·폐부표 회수·관리 강화,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 **육상유입**: 하천 유입 차단 및 생산·유통·소비단계 플라스틱 저감
- ◆ **해외유입**: 주변국과 공동 조사·연구 및 합동 대응팀 구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

** (2019) 타당성 용역 → (2020)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 (2021) 시행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 친환경 부표 보급률: (2018) 23.6% → (2022) 50%

한편,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해역관리청: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오염방지 활동 등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

** 하천관리청: 하천의 사용 및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국회 계류 중)]

또한, 외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수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2019 상반기)할 계획이다.

[2]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 ◆ 사각지대 해소: 도서·해저 등 수거곤란 지역 수거 강화
- ◆ 수거 스마트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고효율 장비 도입
- ◆ 지역참여 활성화: 어업인 참여 유도 및 수거·관리를 위한 지역인력 배치

우선,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서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하여 수거하고 2022년에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항만, 어항 등의 해저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어한기 등 일정 기간에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거 환경을 조성한다.

* 자율관리공동체,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수거 실적이 높은 어촌계에 가점을 부여

** 어업인·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정기간(1개월↓) 동안 시·군 단위 해역별로 적용

[3]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 ◆ **처리:**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구축 및 위탁 처리업체 관리 강화
- ◆ **재활용:** 해양쓰레기 관련 제품 재활용 의무율 상향 및 수요 확대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또한,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환경부)

[4]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 관리기반 강화: 해양폐기물법 제정 및 미세플라스틱 분포·위해성 조사
- ◆ 국민인식 제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및 맞춤형 교육 시행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실시한 슬로건* 공모전을 시작으로, 5월 31일 바다의 날에는 2019년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 캠페인 공식 슬로건 :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

또한,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